

## 장기 저난가, 채란농가 도산위험 커진다.

요즘 사정한파로 인해 안 일이지만 명절 때마다 떡값으로 수백만원씩 오갔다는 소식이 다. 계란 한개 값이 10여년전이나 같다는 사실을 놓고 볼때 가히 짐작키 어려운 일임에 틀림 없다.

물가당국에서는 계란이 아직도 물가를 주도하는 범인으로 간주 지난번 경제장관회의 때에도 계란을 감시품목 중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수백만원짜리 떡값이 뇌물이나, 호의냐를 놓고 죄가 되느니, 안되느니 한 단는데 생산비선이 무너진지 몇개월째 되는 계란값이 도대체 물가를 얼마만큼 부추겼다는 말인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 판국에 상인들은 계란유통에 있어 생산자들에게 협조할 수 없다는 통고처분을 하여 가뜩이나 물동량이 많아 노심초사하는 양계업자들을 암울하게 만들었다.

대처방안으로 양계협회, 한국계우회, 천호계우회에 있는 전화자동응답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후유증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비수기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원자재 개념으로 계란 생산비가 47~48원대에 이르고 있다는게 중론인데 실제 출하가격은 이 보다 10여원 낮게 거래되고 있어 생산량만큼 손해액이 커진다는 결론이다.

지금 용자를 받아 양계장을 새로 지은 농가들은 이자를 낼 여력조차 없다하여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별반

변동이 없어 소비를 자극할 묘안이 없을 뿐더러 유통기능을 상인들이 쥐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채란업은 저난가 시대를 맞아 도산 등 험악한 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소비처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야 하는데 유통에 자신없는 양계인들은 스스로 감산해야 하고 부동산 개념으로 경영하는 농장은 전업도 고려해 볼 때이다.

양계업의 가격안정대 적용을 그간 여러 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양돈업도 가격안정대를 폐지하고 자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산업을 안정화시켜 나간다고 정부가 기본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양계업의 불황을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더더욱 할 수도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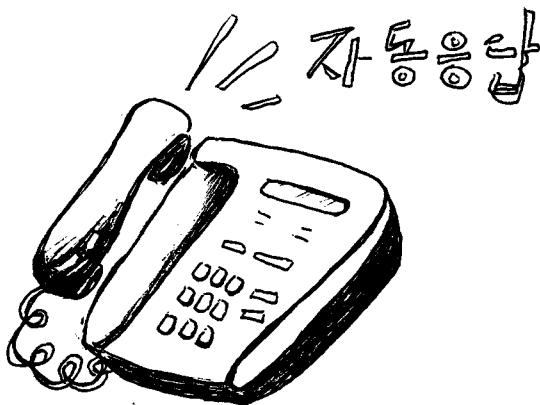
대물림이 어려워 투자도 못하는 시설 낙후의 농장들이 많은데 여러 곳에서 임대설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몇개월을 더 끌고 간다면 인건비와 사료외상이 늘어 도산하는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내가 살기 위해 전진을 잠시 중단하는 전술도 필요한 때가 있음을 중시하자.

## 수급조절자금운용, 양축가들이 못마땅해 한다.

정부는 금년에 닭고기·계란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양축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닭고기 부문에 44억, 계란부문에 22억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닭고기 부문은 서울·경기양계조합, 전북양계조합, 축협중앙회, 천호, 하림, 한일, 영육, 류성, 한냉, 대연, 양지실업, 남양식품 등 11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275만수분 44억을, 계란부문은 서울·경기양계조합, 흥성축협, 대전·충남양계조합, 전북양계조합, 광주·전남양계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 고창 등 7개 사업체에 4,400만개분 22억원을 수매비축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전년에는 총 80억 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금년의 비축자금은 82% 수준인데 가격추이에 따라 추가 지원을 예상하고 있어 전년 수준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런데 매년 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되어 경기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더러는 업체 경영지원자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오히려 경기를 더 악화시킨다고까지 한탄하는 경우도 있다. 수매자금지원제도의 무용론은 아닐 것이고, 다만 제도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우 선정업체는 1년후 원금+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짐이 있기 때문에 업계를 위한 수매비축의 기본원리 적용보다는 수익사업의 선택을 떨 수 밖에 없어 목표를 벗어난다는 지적들이어서 금리를 없애고, 장기비축을 고려해



시설조건도 업체선정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수매비축은 가격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정부는 자금이 지원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양축가들의 지적도 참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해야 할 것이다.



### 인력난은 더 심화되는데 농장주가 해야 할 일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평균학력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뀜에 따라 경제여건이 달라져 실업의 양상도 크게 변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3D) 일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산업체에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0세 미만 젊은 층들의 3D기피현상이 더욱 뚜렷한데 양계업도 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계농장은 인력난과 환경공해규제강화조치로 인해 시설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일부 농장에서는 외국인 체류자까지 고용하는 경



우도 있는데 한결같이 노동의 질(고용인의 작업능력)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과거와 같이 사료와 물을 주고 닭을 키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인력난으로 합리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닭고기와 계란가격은 물가상승률 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입개방이다, 생산과잉이다 하여 생산비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앞으로는 생산비 경쟁을 통하여 유지해 나가야 할 입장이고 보면 농장에서의 인력관리는 경영상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시설자동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장 여건이 열악한 환경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노동력을 제공할 인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보인다.

우리나라 유통체계나 소비패턴상 농장규모만 키운다고 될일은 아닌 것 같다. 걱정한 가족단위의 관리규모를 설정하고 가능하면 경영주들이 시설자동화된 농장관리를 해나가는 각오가 필요하다. **양14**